

# 2019년 지방직 9급 사회 문제와 해설(㉠책형) (2019.06.15.)

법과 정치 1~10번(10문제)  
사회·문화 11~15번(5문제)  
경제 16~20번(5문제)

##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선거구 법정주의란 선거구를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② (O)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 (O)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④ (X) 최다수 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는 제도를 '다수 대표제'라고 합니다. 다수 대표제에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 다수 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2. (가)~(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 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는 '홉스', (나)는 일반 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루소', (다)는 자연 상태를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는 '로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① (X) 홉스(가)는 군주의 권력은 제한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절대군주제를 옹호하였습니다.
  - ② (O) 루소(나)는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이 소유하며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보아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 ③ (X) 로크(다)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④ (X) 홉스(가)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고, 루소(나)와 로크(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했습니다.

###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유럽연합(EU)은 특정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포괄적(일반적) 국제기구입니다.
- ② (X) 국제연합(UN)은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국제 엠네스티)는 민간 단체나 개인을 가입 주체로 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 ③ (X) 코카콜라, 나이키, 구글 등과 같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합니다.
- ④ (X) 강대국의 전·현직 국가 원수, 교황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하다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국가기관 간의 견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O)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 ③ (O)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인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X)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탄핵 심판권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권한입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 한다.
-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국제 평화주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규정하여 국제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② (X)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여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에 한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 ③ (O)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O)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 법규의 존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이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이혼숙려기간(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 1개월)은 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X)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갑도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을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O) 이혼 당사자의 일방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O)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서신 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837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 <보 기> —
- ㄱ. 형사소송법
  - ㄴ. 근로기준법
  -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ㄹ. 민법
  - ㅁ. 국가배상법
  - ㅂ. 소비자기본법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ㅂ
- ④ ㄴ, ㅁ, ㅂ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이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ㄱ. 형사소송법(공법) - 형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공법'에 해당합니다. 공법이란 공적인 관계(개인과 국가 혹은 사회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ㄴ. 근로기준법(사회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회법) -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ㄹ. 민법(사법) - 사법(私法)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사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이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ㅁ. 국가배상법(공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공법'에 해당합니다.

ㅂ. 소비자기본법(사회법)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생략 -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 생략 -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x. xx.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위헌법률심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된 자료는 「2019고합○○○」 사건의 재판 당사자인 홍길동이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인 「○○법 제△△조 제△항」이 위헌이라 판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법원(□□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게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① (X)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며,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② (O)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이 기각되면 재판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X)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해당 재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은 '헌법 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야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④ (X)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기 위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② 형사보상제도
- ③ 국가배상제도
- ④ 배상명령제도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배상명령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인 사기죄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갑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② (X) 형사보상제도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형사 사건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며,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아니므로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③ (X) 국가배상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개인인 을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④ (O)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사기죄로 기소당한 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나)는 공무담임권으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다)는 청원권으로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① (X) 자유권(가)은 국가에 대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 ② (X)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는 현대적 권리인 ‘사회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O) 청구권(다)은 다른 기본권이 국가나 개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 ④ (X)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A** 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B** 라고 한다.

<보 기>

- ㄱ. A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B의 총합이다.  
 ㄴ. 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ㄷ. 사회 변화에 따라 B는 A가 되기도 한다.  
 ㄹ. B는 A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전체 문화와 하위문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는 전체 문화(A)입니다. 반면, 전체 문화 내부에 존재하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는 하위문화(B)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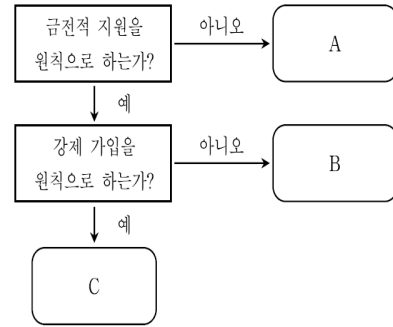
ㄱ. (X) 사회 내의 모든 하위문화(B)의 총합이 전체문화(A)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문화(B)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만 전체 문화(A)가 됩니다.

ㄴ. (X)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인 하위문화(B)는 문화 다양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ㄷ. (O)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하위문화(B)는 시간의 흐름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전체문화(A)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위문화(B)가 확산되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게 되는 경우 전체문화(A)가 됩니다.

ㄹ. (O) 하위문화(B)는 지배적 문화인 전체문화(A)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위문화(B)가 전체문화(A)에 적대적이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문화라고 합니다.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한다.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물음에 ‘아니요’ 라고 답한 A는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물음에 ‘아니요’ 라고 답한 B는 공공부조, ‘예’라고 답한 C는 사회보험이 됩니다.

- ① (O) 상담, 재활, 돌봄 등의 형식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A)의 특징입니다.  
 ② (O) 공공부조(B)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사회보험(C)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부조(B)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사회보험(C)의 수혜 대상자 범위보다 좁습니다.  
 ③ (O) 공공부조(B)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사회보험(C)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C)은 공공부조(B)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④ (X) 사회보험(C)의 비용은 사회보험 가입자와 기업주나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조(B)의 특징입니다.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생산 방식	(가)	소품종 소량 생산	(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	+++	++
사회의 다원화 정도	++	+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	+++	+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 ④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농업 사회 VS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소품종 소량생산의 생산방식은 농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B는 '농업 사회'를 의미합니다.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가정과 일터의 결합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 사회의 특징입니다. 정보 사회에서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가 정보 사회, A가 산업 사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는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A는 산업 사회, B는 농업 사회, C는 정보 사회가 됩니다.

- ① (O) 산업 사회(A)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이 생산의 중심이 되는 반면, 농업 사회(B)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됩니다. 참고로 정보 사회(C)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중심이 됩니다.
- ② (X)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회는 산업 사회(A)입니다.
- ③ (X) 통신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사회(B) > 산업 사회(A) > 정보 사회(C) 순으로 나타납니다.
- ④ (X) 산업 사회(A)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 사회(C)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나타납니다.

14.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나)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가)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나) 로 접근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 탐구 방법 - 실증적 연구 방법, 해석적 연구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회 과학 연구 방법에는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서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가)는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나)는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 ① (X) 일기나 편지 등의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은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나)의 특징입니다.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가)은 수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로 활용합니다.
- ② (X)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가)이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이 같아야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나)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 ③ (O) 수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기 유리한 것은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가)의 특징입니다. 반면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나)은 인간 행동의 동기와 의미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설명에 유리한 것은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가)의 특징입니다.
- ④ (X)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료를 수치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에서 중시합니다.



15. (가)~(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
- (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되는 경우에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 (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재소자들의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기도 한다. 또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낙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합니다.

- ① (O) 낙인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즉, 일탈은 행위의 속성이 아닌 사회적 정의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 ② (X) 낙인 이론(가)은 일탈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반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나)은 기능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 ③ (X)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와해되고 사회 구성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확립되지 않을 때 아노미 상황이 나타나 일탈 행동이 일어납니다.
- ④ (X) 일탈 행동의 학습 과정과 반복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다)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다)은 일탈을 일탈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반면, 낙인 이론(가)은 일탈을 보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나)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 주목합니다.

16.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infty$ )이면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된다.
- ③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 ④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수요량 변화율이 0%이므로,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 ② (X)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infty$ )이면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는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 ③ (O)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④ (O)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는 것이므로,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17. 다음 표는 각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0개	80개
을국	90개	60개

-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 ③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15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 ④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무역 이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양국에서 각 재화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4/5개(=80/100)	X재 5/4개(=100/80)
을국	Y재 2/3개(=60/90)	X재 3/2개(=90/60)

- ① (X) 위 표에서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ecause \frac{4}{5} > \frac{2}{3}$ ).
- ② (X)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지만, X재 생산은 비교 열위에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갑국이 Y재 생산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교역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O) 어떤 국가가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특화 상품 1단위 > 특화 상품 1단위의 기회비용

이에 따르면 갑국이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Y재 1개 > X재 5/4개', 을국이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X재 1개 > Y재 2/3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국과 을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Y재 2/3개(=10/15) < X재 1개 < Y재 4/5개(=12/15)'가 됩니다. 따라서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15개의 교역이 가능합니다.

- ④ (X) 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Y재를, 을국은 X재를 각각 생산합니다.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 GDP	100	110	100
명목 GDP	100	110	110

-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각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물가 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100 \left( = \frac{100}{100} \times 100 \right)$	$100 \left( = \frac{110}{110} \times 100 \right)$	$110 \left( = \frac{110}{100} \times 100 \right)$

- ① (X) 2016년과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으로 같으므로, 2016년과 2017년의 물가는 같습니다.
- ② (O) 2016년보다 2017년 실질 GDP가 크므로,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 ③ (X) 2016년보다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크므로,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 ④ (X) 2017년보다 2018년 실질 GDP가 작으므로,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19. 경제 활동 참가율은 80%이고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 관련 지표의 계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이 문제는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여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 참가율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text{경제 활동 참가율} = \frac{\text{경제 활동 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문제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80%라고 하였으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이라면 **경제 활동 인구는 80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문제에서 고용률이 60%라고 하였으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60명**이 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가 80명, 취업자 수가 60명이라면 **실업자 수는 20명**이 됩니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따라서 실업률은  $25\% \left( = \frac{20}{80} \times 100 \right)$ 가 됩니다.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연도	2017년	2018년
소득 구간		
2,000만 원 이하	5%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5%	20%
5,000만 원 초과	35%	30%

※ 소득세 부과 방식 :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의 적용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2017년과 2018년의 소득세제는 모두 소득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에 해당합니다.
- ② (X)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율이 5%p 상승했다고 하여 소득세액이 5%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소득세액	2,000만 원 × 5% = 100만 원
2018년 소득세액	2,000만 원 × 10% = 200만 원

이 경우 소득세액은  $100\% \left( = \frac{200-100}{100} \times 100 \right)$  증가합니다. (위 계산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문제를 풀이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도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O)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7년과 2018년의 소득세액을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소득세액	(2,000만 원 × 5%) + (1,000만 원 × 25%) = 1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2018년 소득세액	(2,000만 원 × 10%) +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따라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합니다.

- ④ (X) 해당 국가는 누진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연간 소득이 3배 많다면, 소득세액은 3배보다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보다 많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iv>연간 소득</div> <div>2,000만 원</div>	<div><math>2,000\text{만 원} \times 10\%</math></div> <div><math>= 200\text{만 원}</math></div>
<div>연간 소득</div> <div>6,000만 원</div>	<div><math>(2,000\text{만 원} \times 10\%) + (3,000\text{만 원} \times 20\%)</math></div> <div><math>+ (1,000\text{만 원} \times 30\%)</math></div> <div><math>= 200\text{만 원} + 600\text{만 원} + 300\text{만 원}</math></div> <div><math>= 1,100\text{만 원}</math></div>

(위 계산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문제를 풀이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도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